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 11. 21.(목)

부산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전화 051-606-4302
팩스 051-606-4241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전화 051-663-2312
팩스 051-663-2954

자료문의 :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
전담부, 남해해경 수사과
주책임자 : 해양·강력범죄전담부 검사
박민경(051-606-4433),
남해해경 수사계장 김성욱
(051-663-2054)

제18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개최

- 해양범죄 실태진단과 개선방안, 해양마약범죄 수사관할 모색 등 -

-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영학),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해양범죄연구회와 공동주관으로 '24. 11. 20.(수) 부산항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제18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 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방검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대학교가 주축이 되어 '11. 6. 9. 발족한 후 국립해양조사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사법학회 등 해양부문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
- 이번 세미나에서는,
 - '해양범죄 실태진단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최근 나날히 발전하는 해양범죄의 실태를 진단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각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발표가 이루어졌고,
 - '해양 마약범죄 수사관할 범위 고찰'을 주제로 남해해경에서 올해 1월 단속한 '부산 신항 코카인 100kg 밀수' 사건을 토대로 대규모 해양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해경의 적극적 수사 필요성을 알리고, 검찰 등 유관기관 간의 협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범죄연구회 활동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해양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I 해양범죄연구회 활동 상황

- 해양범죄연구회(회장 부산지검장 정영학)는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 사건’을 계기로 다양화·지능화되어 가는 해양범죄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족
 - 해양범죄연구회는 2011. 6. 9.부터 2024. 11. 20.까지 총 18회에 걸쳐 부산지방검찰청, 한국해양대학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함
- 해양범죄연구회의 축적된 지식과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사건’, 2015년 ‘오룡호 침몰사건’ 등을 해결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17. 2. 「해양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됨
- 이번 제18회 세미나는 최근 대규모 해양 마약범죄 수사에 대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의 발표와 부산지검 마약 전담검사의 토론을 통해 검·경의 유기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음

II 제18회 해양범죄연구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11. 20.(수) 16:00 ~ 20:00,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층, 이벤트홀C
- 참석 인원(80여명)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한국해양대학교 부총장, 국립해양조사원장, 판사,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와 부산지검 소속 검사 등
- 주제발표 및 토론

제1주제	□ 해양범죄 실태진단과 정책개선 방향 · 발표자 : 민영훈(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위원)
	□ 지정토론 · 박형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변준석(법무법인 PK 변호사)
제2주제	□ 해양 마약범죄 수사관할 범위 고찰 · 발표자 : 박기정(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 지정토론 · 이재표(부산지방검찰청 마약전담 검사) · 최정호(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

● 성과 및 의의

- 참석자들은 최근 보다 발전하는 해양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경을 비롯한 각 유관기관 간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함
- 세미나를 계기로 각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해양범죄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해 활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IV

향후 계획

- 부산지방검찰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범죄연구회 활동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해양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나갈 예정임

- ※ 첨부 : 1. 해양범죄연구회 학술세미나 사진
2. 주제발표 내용 요약
3. 역대 학술세미나 발표주제 내용

[첨부1]

해양범죄연구회 학술세미나 사진



※ 해양범죄연구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사진



※ 발표자와 토론자 간의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장면

[첨부2]

주제발표 내용 요약

제1주제(해양범죄 실태진단과 정책개선 방향)-민영훈(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위원)

- 최근 5년 간 해양범죄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소개함
 - 해양관련 주요특별법 위반사범의 죄명별 발생 건수의 연도별 변동성이 큰 바, 이는 관할해역에서 단속이 지속·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고, 원인은 수사인력 부족과 지리적 관할의 광범위에서 기인함
 - 형사정책적으로 ① 해양범죄 공간 분석 기법 등 범죄 분석 빅데이터 기법 도입, ② 해양범죄 관련 특별사법경찰의 역량 강화, ③ 국제범죄 전문수사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토론 주요 내용
 - 수사권 조정 후 검찰 수사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해경 차원에서 적극적 기획 수사를 통해 주요특별법 위반범죄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음(법무법인PK 변호사 변준석, 42기)

제2주제(해양 마약범죄 수사관할 범위 고찰)-발표자 박기정(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 해경의 수사관할의 한계 해양 마약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을 피력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
 - 남해해경은 올해 1월 부산신항에서 코카인 100kg 밀반입 사건을 인지하는 등 대규모 마약범죄에 대한 해경의 대응이 필요하나, 관할권 문제로 수사지연* 등의 한계가 있음
 - * 해경의 직무범위는 ‘해양 관련범죄’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양을 통해 육지로 유입된 마약 관련 수사의 경우, 해양 관련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등 수사지연 문제가 발생함
 -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마약류수사 전담조직 DEA는 선박을 이용한 대규모 해양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정보(마약류 발송) 및 자국 내 육상 정보(마약류 주문 및 구매)를 기초로 연계·확대 수사를 통해 즉시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최근 검찰을 중심으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수사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약류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등 초 관할적 마약류범죄수사의 초석이 마련되었고, 부산지검과 남해해경 역시 '23. 4. 이후 부산지검 주관으로 실무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 향후 보다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발현되길 희망함
- 토론 주요 내용
 - 수사관할권 유무는 수사의 효율이 아닌 위법성의 문제이므로 그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수사 초기부터 엄격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해양에서 육상으로 이어지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폭넓은 수사관할권이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수사초기부터 경찰과 해경의 협업이 필요하고, 검찰도 적극 협력할 것임(부산지검 마약전담 검사 이재표, 변1회)

[첨부3]

역대 학술세미나 발표주제 내용

일자·장소	발표 주제	일자·장소	발표 주제
제1회 '11. 6. 9. 부산지검	아덴만 여명작전의 법적 검토	제8회 '15. 6. 9. 남해해경	우리나라 항만보안 개선방안
	해적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수산물 검사·검역 품질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
	해적관련 국내외 형사법규 현황과 개선방안		정부조직 개편 후 해상치안 확보 대책
	소말리아 해적사건 수사 소고		공해상 선박충돌 사건과 관련한 재판권
	소말리아 해적 피해 예방대책		수산범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제2회 '11. 12. 13. 한국해양 대학교	소말리아 해적 피해 기술적 방지대책	제9회 '15. 12. 3. 부산지검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형사과실의 인정범위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과 사법재판의 비교	제10회 '16. 6. 16. 한국해양 대학교	선원의 승·하선공인제도 개선방안
	해양범죄와 선원의 처벌-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범죄의 주요유형 및 수사사례
	해적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적 제언		중국 해상 형사범죄 사건의 실무처리에 관한 연구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형사관할권 행사	중국 해양 관련 법집행기관의 연혁과 현황 및 발전방향		
제3회 '12. 6. 7. 부산지검	편의치적선의 불법성에 관한 연구	제11회 '16. 12. 8. 부산지검	국외 해양범죄 신병확보에 관한 현행법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선상폭력의 형사법적 제문제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의 무기사용의 정당성 연구
	도로교통법과 해상교통법의 비교		현대 위험사회에서 선박운항자의 형사 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적 제언
제4회 '12. 12. 6. 부산시청	21C 수산자원 적극관리 방안	제12회 '17. 6. 8.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해양범죄의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규제를 위한 법적 대응역량 강화방안		선박 내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 검토
	국제해양법상 추적권의 요건과 한계		고의 선박침몰과 법적 문제
제5회 '13. 7. 4. 부산지검	해양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제13회 '18. 8. 30. 부산지검	다수 인명피해 사고 원인규명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IUU어업의 국제적 추세와 대응방안		공해상 선박충돌 및 기타 항해사고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고찰
	해양뺑소니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제6회 '13. 12. 3.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 범령 적용에 관한 연구	제14회 '19. 1. 23. 남해해경	감수보존선박 도주·검거 사례-팔라디호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법적문제와 국내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제15회 '19. 7. 3. 한국해양 대학교	불법행위 외국선박과 긴급추적권의 행사요건
	PSSA의 국제법적 한계와 개선 연구		광안대교 선박충돌사고 수사사례
제7회 '14. 12. 10. 부산지검	선장의 형사책임	제16회 '20. 1. 15. 부산지검	광안대교 등 충돌사고에 대한 해상보험 분야에서의 처리문제
	선박운항 안전확보를 위한 개정법률안의 형사법적 쟁점	제17회 '23. 5. 16. 부산지검	어선 해양사고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
	해상안전범죄의 적용법률에 대한 고찰		어선 관련 해양사고의 형사법적 제문제
			해양범죄 수사절차개관 개정 형사법령을 중심으로
			해양범죄수사에서 일반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